

# 한국에 있어서의 民族主義

車 基 璧

(成均館大學校)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統一=南北統一 |
| II. 獨立=自主   | V. 맺는 말     |
| III. 發展=近代化 |             |

## I. 머리말

민족주의는 역사적 상황이나 추진세력에 따라 형태나 기능이 달라질 뿐 아니라 이 낱말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그 의미·내용이 달라진다. 여기서는 다의적일 수 밖에 없는 민족주의란 낱말을 「민족의 統一, 獨立 및 發展을 지향·추진하는 이데올로기와 운동」<sup>1)</sup>을 총칭하는 뜻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민족주의를 이같은 뜻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한국민족주의의 과제에는 독립=자주와 발전=근대화는 물론이고 통일=남북통일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민족주의는 아·아민족주의 처럼 「민족 없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서유럽민족주의 처럼 「민족 있는」 민족주의이다.<sup>2)</sup> 그러나 한국민

1) 丸山眞男, 「增補版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東京: 未來社, 1973), p. 274.

2) 서유럽에서는 민족이 먼저 형성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주의가 발생했으나, 아·아신생국에서는 거꾸로 민족주의가 먼저 일어나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족주의는 서유럽민족주의와는 달리 자기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 「內生的」 민족주의가 아니고 외부의 힘에 자극되어 일어난 「外生的」 민족주의이다.

한국민족주의가 「外生的」 민족주의라는 말은 그 발생 당시 민족의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성장과정에서도 외세에의 對處를 우선시한 나머지 근대화 추진이나 대내적 통합내지 사회구조 재편성과 같은 자기발전과제가 소홀히 되어 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달리 말하면, 한국민족주의는 자기발전을 지향하기 보다는 외세에 저항하는 속성을 더 강하게 지닐 수 밖에 없었는데, 종래의 한국민족주의 연구는 이 저항적 속성에 치중한 나머지 여러 한계성을 드러냈다. 즉 그것은 반봉건투쟁면을 소홀히 한 채 반제투쟁면 위주로 민족주의 문제를 살펴 왔는가 하면, 해방으로 저항의 대상이 없어지자 한국민족주의의 해방후의 기본과제인 분단극복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해 왔던 것이다. 이같은 한계성에 대한 반성으로 요즘에는 한국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민족사의 내적 발전이란 시각에서 살펴려 하는 한편 한국민족주의의 담당세력으로서 민중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sup>3)</sup>

이 글에서는 이러한 최근 연구동향에 유념하면서 여태까지 축적되어 온 연구업적들을 참고하여 한국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그 과제별로 살펴 보려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민족주의의 흐름이나 성격울 올바르게 이해하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은 대체로 세단계, 곧 구한말(1876~1910), 일제시대(1910~1945), 해방후로 나누어지나, 여기서는 통시적으로 살펴피되, 과제의 성격상 자연 독립=자주는 해방전 시기에, 그리고 통일=국토통일은 해방후 시기에 치중해서 다루게 됨을 미리 밝혀 둔다.

3) 宋建鎬·姜萬吉編, 「韓國民族主義論」(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2), pp. 4~5.

## II. 獨立 = 自主

단일개념으로서의 한민족의 기원은 고려초에 소급되나, 그것은 이른바 준민족이지 근대적 민족주의의 운반체인 근대민족은 아니다. 한국에서 근대민족의 형성계기는 개항에서 찾아진다.

개항은 한민족으로 하여금 종래와는 아주 다른 새로운 세계에 직면케 했다. 새로운 세계는 민족국가의 세계로서 기왕의 동아시아 사대 질서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민족평등의 세계요, 여러 민족주권국가간의 세력균형에 의거하는 세계였다. 한국이 이 새로운 세계와 직면한 시기는 근대국가체제라 불리우는 유럽에서 형성된 그러한 세계가 비유럽세계로 팽창·확대하던 제국주의시대였다. 실로 한국을 에워싼 국제환경은 열강이 각축하는 약육강식의 냉엄한 세계였다.

개항을 계기로 한민족은 그러한 새로운 세계에서 「生存」을 위해서로 경쟁하는 서유럽 근대국가와 같은 「主權國家」를 이룩해야 했다.

그런데 외세의 도전으로 민족보전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민족보전을 위한 방법을 에워싸고 국론이 몇 갈래로 나누어져<sup>4)</sup> 유효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 끝에 결국 국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1960년대에 이르러, 구한말 당시 한민족이 국제열강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깊어감에 따라 민족의 저항에는 그것을 뒷받침해준 세 흐름의 사상, 곧 開化思想, 斥邪衛正思想, 東學思想이 있었다고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세 사상 내지 세 사상에 의

4) 故 趙芝蕪 교수와 千寬宇씨는 각각 “韓國民族運動史,” 「韓國文化史大系 I」(서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64), p. 561과 「韓國史의 再發見」(서울: 一潮閣, 1975) pp. 369~71에서 세 계보로 나누고 있고, 韓興壽 교수는 「近代韓國民族主義研究」(서울: 延世大出版社, 1977), p. 69~83에서 네 계보로 나누고 있다.

거하는 운동중 민족보전과 근대지향이라는 당시의 민족적 과제에 비추어 어느 쪽이 보다 올바른 노선이었나하는 문제를 놓고 견해가 나누어졌다.<sup>5)</sup>

구한말 당시에는 근대지향도 따지고 보면, 민족보전을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당시의 민족적 과제의 핵심은 반침략을 통한 민족보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침략을 통한 민족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척사위정사상은 그것이 토대로 삼고 있는 華夷觀念 때문에 서양을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한편 봉건체제를 온존하려 들어 민족적 위기를 극복할 유효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그 전통적이며 봉건적인 사상 내용은 척사위정사상의 구국이념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동학의 반봉건·반침략사상은 한편으로는 조선조의 지배이념인 朱子學을 거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화이적 세계관을 탈피한 것이었기는 하나, 역시 전통적 가치에 집착하여 근대적 문물을 거부함으로써 민족을 보전하려 함에 있어 척사위정론과 같은 결합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근대지향적이며 反(脫)華夷的이요 反封建的이었던 개화사상은 적어도 사상면에서는 「반침략」을 통한 민족보전이라는 시대적 중심과제를 가장 유효하게 담당해 나갈 사상형태였다 하겠다.<sup>6)</sup>

그러나 세 사상은 실천과정에서는 그 성격이 달라지곤 했다. 실로 구한말 당시, 봉건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근대지향=개화가 반침략=자주독립에 직결된 것은 아니었다. 개화운동이 외세침략에 무력했을 때 그 약점을 잡고 「반침략」투쟁에 일어섰던 것이 척사위정론자요 능

5) 趙璣濬 교수는 개화사상 내지 개화운동쪽을 〈韓國資本主義成立史〉(서울: 高大出版部, 1973), 崔昌圭 교수는 척사위정사상 내지 운동쪽을 〈近代韓國政治思想史〉(서울: 一潮閣, 1972), 그리고 安秉直 교수는 동학사상 내지 운동쪽 〈三·一運動〉(서울: 한국일보사, 1975)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6) 金榮作, 「韓末ナツヨナリズムの研究」(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5), p. 254.

민군이였다.

구한말 당시에는 이렇듯 「근대」(개화사상)가 아니라 「반근대」(척사위정, 동학사상)를 통해서만 「반침략」=자주독립에 충실할 수 있었고, 자주독립과 직결된 「근대」는 오로지 「반근대」(동학운동) 속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체로 동학사상 내지 운동쪽이 보다 올바른 노선이었다는데 견해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개화사상은 「自己樹立」에 앞서 근대화에 나선 것이고, 척사위정사상은 「자기수립」에 앞서 「自己防衛」에 나선 것이라면, 동학사상은 비록 그 운동은 청·일 두나라의 무력간섭으로 실패했을지언정 「자기수립」과 「자기방위」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보인 사상이었던 것이다.<sup>7)</sup>

불행히도 위 세 사상 내지 운동은 국가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단합된 민족보존운동을 전개할 수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한 마디로 민족의 에너지를 단일한 국가목표에로 결집할 수 있을만큼 내재적 통합이 이루어져 있지 못한데 기인했다 하겠지만, 김영작교수는 한쪽으로부터의 자주가 다른 쪽에 대한 종속의 경향을 띠는 것이었다는 이른바 「自主意識의 兩面性」을 들어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sup>8)</sup>

아무튼 상호병존하면서 자기 독자적인 민족보존투쟁을 전개해 온 세

7) 文丞益, 「韓國近代思想의 論理的 性格,」 「韓國政治學會報」, 第十輯 (1976), pp. 161~63.

8) 우선 사상내재적 요인을 보면, 척사위정사상은 문화유형을 달리하는 구미열강(일본포함)에 대해서는 自主性이 매우 강했으나, 중국대륙의 지배 권력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개화사상은 그 정반대였다. 동학사상은 어느 편인가 하면 구미열강(일본포함)에 대한 자주성이 더 강했다 하겠다. 다음 사상의재적 요인을 보면, 구한말 당시 한반도는 서로 대립하는 두 후진자본주의 국가—처음에는 중국과 일본, 나중에는 러시아와 일본—간의 식민지쟁탈전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두 나라는 침략에 앞서 한반도내부에 자국의 정치적 세력을 부식하려 들었으므로 한반도안에는 두 나라간의 대립에 따라 지배층내부의 대립이 조성되었다. 국내정치가 국제환경에 제약당하고 있는 상황 밑에서 한나라로부터의 자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다른 나라에 대한 종속과 연결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金榮作, 1975, 앞의 책, pp. 255~59).

운동은 일제의 식민지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乙巳條約 이후에는 크게 두 갈래로 통합되었다. 하나는 칙사위정론자와 농민대중과의 결합에 의한 의병투쟁이고, 다른 하나는 개화파와 도시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애국계몽운동이다. 이 두 갈래의 민족운동이 하나로 통합되는 동시에 한국의 독립운동이 민중적 기반을 갖게 된 것은 3·1운동을 계기로 해서이다. 3·1운동 이전에도 한국의 민족운동에는 동학운동, 의병운동, 독립협회운동 처럼 민중이 참여한 운동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직 민중의 참여는 부분적이었고, 그 민중의식도 강도가 약했다. 그러던 것이 3·1운동에서는 한국의 민족운동이 전체민중의 기반 위에서 서게 되어 민족적 일체감의 일차적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1운동은 한국민족주의의 대외인식면에서도 일대 전기를 이룬다. 3·1운동 이전의 한국민족주의 사상의 대외인식 수준을 보면, 개화사상에서는 아직도 외세침략이 급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근대화 의식은 강했으나 반외세의식은 약했고, 의병운동에는 칙사이상의 사상적 발전이 없었다. 을미의병에서 투쟁대상으로 규정한 적은 중화주의적 사회질서의 적이요, 기껏해야 왕조의 적, 전통적 양반질서에 대한 적에 불과했다. 애국계몽운동도 외세침략의식은 강했으나 의병투쟁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만큼 계몽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더구나 자강론적 계몽주의는 일제를 민족(nation)의 적으로 설정하기는 했으나, 新民會運動에서 볼 수 있듯이, 「자강」이 선행하고 있어 일제를 생존경쟁의 適者, 강자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밑에 깔고 있었다. 3·1운동의 독립선언에 와서야 비로소 자유민으로서의 한 민족, 즉 근대적 민족의 적으로서 일제가 규정된다. 그러나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유의하여 한민족의 경제적 생존의 적으로 定立하지는 못했다. 이제 3·1운동의 실패를 통해, 일제는 단순한 무력에 의거하는 침략세력이 아니라 경제적 논리를 가지는 제국주의 세력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민족독립을 위해서는 윤리와 계몽, 그리고 空疎한 애

국운동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sup>9)</sup>

그 결과 사회주의가 하나의 대안적인 이념체계로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3·1운동이 실패한데다가 파리회의와 워싱턴회의에 낸 독립청원이 아무런 효력도 나타내지 못하자 민족자결주의 대신에 사회주의가 큰 매력과 호소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sup>10)</sup>

3·1운동후에는 일제의 회유책인 「文化政治」와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한국의 민족운동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통합의 시도와 그 좌절속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그런데 자주주의식의 양면성이 민족운동의 통일을 저해한 것은 구한말 당시에 그치지 않는다. 일제와 투쟁할 때에도 그것이 민족통일전선 형성울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해방후의 국토양단과 그후의 남북대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덧붙였으므로 같은 차원에서 논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이 자주주의식의 양면성의 작용을 해방후라고 해서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들이켜 보면, 한민족의 자주주의식은 부정적 상황아래서는 저항의식으로 나타나 왔고, 긍정적 상황아래서는 恩惠意識으로 나타나 왔다.<sup>11)</sup>

구한말과 일제시대에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 항거하는 가운데서 길러진 한국민족주의의 저항적 속성은 해방후에도 잠재적 형태로나마 지속되고 있다 하겠다. 국토양단이 본시 외세의 타인태다가 일본과의 경제협력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술한 문제점들은 외세에 대한 저항

9) 安秉直, 1975, 앞의 책, p. 147.

申一澈, “韓國獨立運動의 思想史的 性格,” 「申采浩의 歷史思想研究」(서울: 高大出版部, 1981), pp. 243~67.

10) 梁好民, 「現代政治의 考察」(서울: 思想界社, 1962), p. 210.

Chong-Sik Lee,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p. 278.

11) 전자의 형태로서 元나라나 淸나라에 대한 저항을 들 수 있고, 후자의 형태로서 明나라에 대한 은혜의식을 들 수 있다(金雲泰 外 共著, 「全訂版 韓國政治論」(서울: 博英社, 1982), p. 177.)

감을 내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2차대전후 한국이 독립할 때의 연합국, 특히 미국의 지원에 대해 우리는 恩惠意識을 가져 왔다. 지나친 은혜의식은 민족의 참된 자주의식의 성장을 가로막거나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支持開發보다는 외세의 是認獲得에 더 많은 힘을 쏟게 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 Ⅲ. 發展 = 近代化

한국민족주의의 전개 과정을 한민족의 자기발전과정으로 파악하려는 최근의 연구동향은 반제운동에 못지 않게 반봉건=근대화운동을 중시하지만, 그것이 중시하는 반봉건=근대화운동은 정치적으로는 군주국(준민족)에서 국민주권국가(근대민족)로, 경제적으로는 봉건경제에서 국민경제에로의 발전과정으로 파악한다.

#### 1. 政治面 : 君主國에서 國民主權國家로

「國家」像의 발전과정에서 보면, 유럽에서도 근대국가는 절대군주국가에서 국민국가로 발전했거니와, 한국에서도 전통적인 민족형 국가가 王朝史的인 군주국가에서 근대적인 국민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한국민족주의의 대내적 성장과정은 전통사회에서 형성된 민족형태인 「準民族」이 근대적인 국민주권국가형성을 지향하는 「근대민족」으로 성장·발전하는 과정이다.

앞에서 논했듯이, 개항을 계기로 한민족도 근대적인 국민주권국가를 형성해야 되었으나, 그것은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사실 甲申政變이나 동학운동에서는 아직 국민을 주권자로 하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像이 정립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독립협회운동은 한국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국민국가 형성을 지향했다



하겠으나, 그것은 도시중심의 계몽운동에 그쳤으므로 그 운동을 통해 현실적으로 근대국가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다. 大韓自強會운동에서도 그「自強」의 주체는 부국강병형의 주권국가였으나 그들이 드높은 애국심의 대상이 국민이 주권자인 새 조국이었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産業과 教育」의 장려를 통해 그들이 건설하려던 「자강」적 국가는 대외적으로는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생존경쟁력을 가진 국가였으나, 대내적으로는 清末 變法자강파가 제시한 「開明專制論」(입헌군주제)의 테두리를 못 벗어난 국가였다.

그러던 것이 新民會운동에 이르면 이념면으로나 조직면으로나 근대 국민국가형에 바짝 다가선다. 신민회가 표방한 新國은 이미 왕조사적인 군주국도 대한제국도 아니었다. 신국의 창설권을 「국민의 통일연합」에 두고 통치권력의 근원도 단결적 결합을 통해 결집된 근대적인 국민에 두고 있던 신민회는 실로 「代議國家」와도 같은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가진 민족세력이었다.

한국에서 근대적 국민국가 내지 근대민족이 실제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3·1운동에서였다. 3·1운동은 단순한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운동이거나 국권상실이전 상태로 복귀하려는 「復辟」운동은 아니었다. 그것은 근대적 국민국가형성을 위한 민족운동의 총결산이었다. 庚戌國恥이후 민족운동은 3·1운동으로 통합되어 근대적 국민국가의 민족적 기반을 다지고, 해외로 나간 독립운동은 상해임시정부의 성립으로 「民主共和制」의 새 국가상을 정립한다. 국내의 3·1운동과 국외에서의 임시헌법제정과는 불가분의 관련이 있거니와, 3·1독립선언은 바로 민주헌정으로 구현된 민족국가의 잠재적 성립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3·1운동의 거족적 만세시위 속에서 하나의 근대민족이 탄생했다 하겠다.<sup>12)</sup>

상해임시정부에 대해서는 반제=항일운동과 반봉건=근대화운동을

12) 앞의 서술은 申一澈, “3·1運動의 民族觀,” 高大出版部, 1981, 앞의 책, pp. 373~82를 주로 참고했음.

아울러 지도하도록 기대되었으나, 1925년경 이후에는 국민대표자회의 실패, 조선공산당의 성립으로 인한 사상대립의 본격화 등으로 그 역사적 지위를 상실하고 하나의 독립운동단체 처럼 되고 말았다.

임시정부가 하나의 독립운동단체 처럼 되고 만 후에도 그리고 일제의 회유책으로 인하여 자치론자들이 출현한 속에서도 독립운동전선에는 사상과 의견의 대립을 민족적 차원에서 해소하고 항일운동을 근대 민족국가 수립운동으로 이끌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그러한 노력은 좀처럼 결실되지 못했다.<sup>13)</sup>

그 주요 원인은 앞서 논한 「自主意識의 兩面性」의 밑에 깔린 사회경제적 이해의 대립에 있었다 하겠다. 온 국민이 사회경제적으로 공통된 이익기반 위에 서지 않고는 내부적인 사상대립을 극복할 수 없거니와, 공통된 이해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봉건경제에서 국민경제로의 발전을 꾀하지 않으면 안된다.

## 2. 經濟面：封建經濟에서 國民經濟으로

고려초에 형성된 민족국가형 국가는 조선조 후기에 이르기까지 행정상으로 一國이 형성되었을 뿐 경제적으로는 지역과 지역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小宇宙의 집합체에 불과했다. 즉 그것은 국민경제 없는 민족국가였다. 한국사에서 국민경제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민족국가를 재조정하려고 최초로 시도한 이들이 실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도로, 도량형, 화폐의 정비, 수송수단의 개선 등을 통해 전국적 시장권을 형성하려는 한편, 신분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전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려 했다. 즉 그들은 지역간, 사회계층간의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準民族」을 「근대민족」으로 재구성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실학자들의 구상을 실천에 옮길 주체세력이 형성되기도 전

13) 姜萬吉, “獨立運動의 歷史的 性格,” 「分斷時代의 歷史認識」(서울: 創作과 批評社, 1978), pp. 174~99.

姜萬吉, “獨立運動過程의 民獨國家建設論,” 宋建鎬·姜萬吉編, 1982, 앞의 책, pp. 107~36.

에 한국은 유럽 근대 자본주의의 시장권에 편입되었다.

유럽의 군함과 대포등 근대문명에 압도당한 구한말의 지도층은 유럽민족주의 부국강병을 본따려 들었다. 그러나 구한말의 부국강병론은 유럽의 민족주의와 산업자본주의가 외형으로 나타난 부와 군사력을 본받고 뒤쫓으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외형으로는 유럽화를 추진하나 내면으로는 종래의 가치관이 그대로 남는다. 구한말 당시 지도층이 내세운 이른바 「東道西器」論은 사회경제적 실체로서는 결국 地主—商人型 부국강병론이었다. 양반을 중심으로 하는 上下倫理인 東道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지주제를 온존할 수 밖에 없는데, 지주제 밑의 토지자본은 상인자본 및 고리대자본과 공존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론은 결국 지주상인을 주축으로 한 민족발전개념의 체계화를 의미했다. 이 이론은 당시 민족의 하층부를 이루고 있던 일반농민이 주축이 된 東學農民軍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대립되었다. 그래서 구한말 지도층은 東道를 내세워 동학농민군을 무마시키려 했던 것이다.

한말·일제시대로 접어들자 점차 유럽민족주의의 외형인 부국강병만이 아니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민족의식이 의식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양반만이 아니라 일반민중도 다같이 결집시킬 구심점으로서 「國魂」 개념이 대두했다. 그러나 민족의 사회경제적 실체로서 국민경제가 형성되지 않고는 국혼개념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민족의 대외적 모순과 민족내의 사회경제적 모순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로 나타난 것이었으므로 그 모순을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대외용 국혼개념과 대내용 사회경제적 실체가 실용성 있게 연결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sup>14)</sup>

일제식민지체제 밑에서는 국민경제의 형성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한편으로는 봉건체력을 부분적으

14) 앞의 서술은 金泳鎬, “韓國民族概念의 社會經濟的 再構成,” 「한가람」, 創刊號(1977), pp. 53~56을 주로 참고 했음.

로 온존·이용하는 보수적 전통유지기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경제 도입을 통해 전통사회를 파괴하는 근대화기능을 동시에 수행했으나,<sup>15)</sup> 그 근대화기능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필요한 한, 그리고 허용될 수 있는 한에서 수행되었으므로, 결국 식민지적 근대화가 강행된데 불과했다.

실제로 일제는 정치적으로는 헌병경찰제도에 의한 이른바 무단정치를 통해 항일민족운동을 철저히 억압하고 경제적으로는 會社令과 土地調査事業을 통해 반봉건적 기생지주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한국민족주의의 반봉건투쟁을 근거에서 부정해 버렸다.

이에 한국민족운동은 항일투쟁에 온 힘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는데 일제하의 최대의 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은 각계 각층이 총동원된 거족적인 운동이었으므로 도리어 민족내부에 전근대적인 봉건성 탈피의 문제를 뒷자리로 물러서게 했다. 1920년대에 이르러 소작쟁의의 형태로 대두된 반봉건투쟁도 기실은 반일운동의 색채가 짙었다.

이리하여 반제의식은 강하나 반봉건의식은 약하다는 한국민족주의의 특성이 더욱 굳어졌거니와, 관념상으로는 도달한 국민주권국가 내지 근대민족을 사회경제적으로 뒷받침할 국민경제 형성은 뒤로 미루어졌다. 그런데 국민경제 형성이라는 이 과제는 해방후에도 완수되지는 못하고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 근본원인은 말할 나위도 없이 국토분단에 있지만, 남한만에 국한할 때 그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해방후 이 땅의 지도층이 된 정치세력은 일제에 의해 온존·육성되어온 지주, 관료출신을 주축으로 하는 보수세력이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봉건성 극복을 통한 국민경제 형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겠다. 둘째, 5·16후 추진된 외향적 산업화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에 안으로는 사회적 이중구조, 밖으로는 경제적 대외의존도 그

15) 崔相龍, “戰後韓國民族主義의 問題狀況,” 『韓國政治學會報』, 第十輯, p. 209.

중에도 대일의존도의 심화를 가져 오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 이종구조의 심화와 경제적 대외의존도의 심화라는 두 현상이 그 근원을 같이 한다는데 있다. 근대화의 문제는 자주와 민족주의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 IV. 統一=南北統一

자주와 근대화의 문제를 위와같이 따져 보면 한국민족주의의 해방후의 기본과제인 국토통일에 대한 전망은 흐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민족주의가 국가주의나 국민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인 한, 국토통일을 포기하거나 단념할 수는 없다.

그런데 통일의 전망을 흐리게 하는 것은 국내적 요인만이 아니고 국제적 요인도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통일은 명백히 현상을 타파하는 성격을 지녔으므로, 현상유지 내지 현상동결을 추구하고 있는 주변 4대국이 한국통일을 내심 달가와 할 것 같지는 않다.

집합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1000년간에 동아시아의 체제변동과 한반도의 안정을 측정 한 연구논문에서 최창윤교수는 다섯 가지 「發見物」 중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동아시아의 체제가 강력한 어느 一國의 독자(점?)적 지배에 놓이게 되면 한반도는 分斷 보다는 統一을 이룩하는 경향이었으나 그 主體性은 상실하기가 쉬웠다. 그러나 체제내에서 서로 비등한 여러 강대국들이 勢力競合을 하게 되면 이들 강대국들의 利益의 相衡이 한반도의 分割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sup>16)</sup>

어떻게 하던 한국민족주의는 분단상태의 고정화를 막고 국토를 통일하되, 그 주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16) 崔昌潤, “東아시아體制의 構造・機能的 變遷이 韓半島의 安定度에 미친 影響,” 앞의 책, p. 270.

국권상실이나 국토분단의 원인을 주로 국제적, 객관적, 요인에서 찾던 종래의 연구태도에 대한 반성으로 요즘에는 국내적, 주체적 요인을 중시하는 연구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실제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서 국내적, 주체적 요인의 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처음에는 국제적 요인 위주로, 다음에는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을 동등하게 생각했으나, 지금은 국내적 요인이 우세하게 된 시점에 이른 것 같다. 40년간에 걸쳐 각기 기반을 굳혀 온 남북한 정치주체들의 현실적 존재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국내적, 주체적 요인에 치중해서 남북통일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동·서독 접근과정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독일과 한반도는 다같이 근본적으로는 국제정치적 요인에 의해 분단되고 있으면서도 주체적 역량이 강한 독일민족은 분단의 현실을 수락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극복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체적 역량이 약한 한민족은 분단의 고정화를 거부하면서 도리어 분단을 고착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독일민족이 반드시 再統一으로 다가서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주로 국제정치적 요인 때문이다. 강력한 통일 독일의 재대두를 미·소등 강대국은 물론이고 독일주변의 약소국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한반도의 경우 통일은 고사하고 대화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주로 국내정치적 요인 때문이라 하겠다. 하기는 아직도 이른바 「新冷戰」의 난기류가 감돌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는 한 마디로 불확실하다 하겠으나, 「舊冷戰」의 귀추로 미루어 보아 그같은 난기류가 거치면 70년대에 운곽을 드러냈던 기본 구도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짐작된다. 70년대의 아시아의 냉전완화와 더불어 다변적 세력균형체제로 전환되고 있던 동북아시아에서는 미·소·중·일등 주변 4대국은 점차 한반도안에서의 분쟁을 원치 않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관계 정립을 바라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주변 4대국이 바란 것은 현상동결을 통한 현상유지이지 현상 타파를 의미하는 "한반도 통일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통일이 국제긴장 요인이 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한반도의 경우는 분단이 국제긴장 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만일 남북한이 완충국으로서 통일된다면 주변 4대국에 위협적인 존재로 되거나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에 큰 변동을 가져 올 성 싶지 않음을 생각할 때, 남북한의 통일 내지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주로 국내 정치적 요인이라 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남북한의 접근 내지 통일은 결국 독일모델을 따르는 길 밖에 없는 데다,<sup>17)</sup> 독일모델은 한반도의 경우에는 분단의 고정화가 아니라 분단 극복=통일로 인도할 수 있는데도 북한측이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남한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있는 북한측도 연방제에 의한 적화통일전략이 실천불가능함을 깨닫게 되고, 또한 실용주의적인 테크노크라트들이 득세하게 되면 대화를 재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독일모델을 수락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날에 대비하여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한 마디로 주체적 통일역량의 배양이라 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동서독 접근과정에서 교훈을 찾기로 한다.

첫째, 정치문제 해결에 앞서 비정치적 교류를 통해 불신해소와 신뢰회복에 힘써야 하고, 둘째, 미·일과의 紐帶強化에 힘쓰는 한편 소·중공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꾀해야 한다. 셋째, 이른바「東方政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브란트정부가 보여준 周到하고 유연하며 강인한 정치적 리더십을 남한정부는 본받아야 하며 국민의 신뢰와 자발적 지

17) Nathan White, "The Necessity for a German Solution to Korea Problem," *Korea & World Affairs*, Vol. 2, No. 3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8).

지를 불러일으키도록 힘써야 한다.<sup>18)</sup> 끝으로 주변 4대국과 친선관계를 가질 수 있는 완충국으로서의 통일한국의 정치이념을 정립하고 그런 이념에 의거한 정치·경제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현재체제를 정비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민족주의는 아직도 완전히는 탈피해 있지 못한 「自主意識의 兩面性」을 극복하고, 외국에 대한 지나친 恩惠意識에서 벗어나 참다운 민족의 자주의식을 키우는 동시에 외세의 是認獲得 보다는 국민의 지지 개발에 힘써야 하겠다.

다음 한국민족주의는 근대화 추진과정에서 빛어지고 있는 사회적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내재적인 발전요소들을 동원하는 한편 특정 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참된 의미에서의 국민적 통일 내지 민족적 일체감 조성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서로 연관되는 이 두 가지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거꾸로 국토통일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

## V. 맺는 말

이상의 고찰에서 명백해졌듯이, 한국민족주의의 세 과제, 곧 자주 근대화 및 국토통일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다.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한국민족주의의 세 과제를 옹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한국민족운동의 발자취에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하겠다.

지난날 한국민족운동에서 민족개념은 주로 피와 언어 또는 얼(魂)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파악해 왔고, 이런 차원에서 민족개념을 극도로 양양한 것이 다름아닌 민족사학운동이요, 국어운동이었다.

18) 林建彦, 「分斷國家」=“ニフのドイツニフの朝鮮”(東京: 鹿島研究所出版會, 1974), p. 316.



이러한 민족개념은 지난날 민족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으나, 그러한 전통적 민족개념을 강조하는 방식은 점차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날 외적앞에서 민족을 대동단결시키기 위해 강조된 전통적 민족개념이 민족내부의 여러 계층이나 세력을 결집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3·1운동은 그 전형적인 史例의 하나이다.

그러나 밖을 향한 大동단결이 안에서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은폐하거나 동결시키는 작용을 하면 敵前分裂을 일으키기 쉽다. 구한말 당시 일제침략세력을 앞에 놓고 민족주의세력이 적전분열현상을 빚은 것은 따지고 보면 각 세력이 대표하는 사회계층이나 요소간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3·1운동 당시 대동단결했던 한민족이 그후의 독립운동과정에서 내부분열을 일으킨 것도 결국은 1920년대 내지 30년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민족내부의 각 요소간의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19)</sup>

이같은 한국민족운동사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한국민족주의가 혈연적 내지 전통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

민족개념 내지 민족주의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재조정된다는 말은 민족을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가 경제적 소유와 경제적 활동에 균등하게 시민적 참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민족의 시민화를 지향하는 참여경제체제 수립은 민족사회 그 자체의 민주화 없이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19) 金泳鎭, 1977, 앞의 글, pp. 51~52.